

# 방제용 드론 수입가 대비 400% 폭리

농촌지역에서 구매 열풍이 일고 있는 농약 살포용 농업(방제)용 드론(Drone)이 수입원가 대비 평균 400% 높은 가격에 판매·공급되면서 영세 농민들만 소위 '호경(호구 고갱)' 취급을 받고 있다.

16일 뉴시스가 단독 입수한 '드론 수입신고 필증'을 확인한 결과 지자체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농가에 인기에 공급 중인 중국 A사 모델의 경우 대당 수입 원가는 미화 4250달러(460여만원)인데 반해, 농가에는 40%를 웃도는 1850여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일선 시·군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폭리 수준'에 가까운 농업용 드론을 구입하는 농가에 구매비용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어 '헬게 낭비'와 '업자 배 불리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드론은 국가적으로도 미래 4차 산업을 선도할 핵심이념으로 선정될 만큼 중요성과 활용 분야 등이 무궁무진 하지만 국내에 유통 중인 농업용 드론의 90% 가까이가 중국 등지에서 수입해 온 제품들로 넘쳐나고 있다.

농업용 드론의 경우 국내 수요만으로는 채산성이 맞지 않아 국산 드론 제조 산업이 얼얼마 단계인 가운데 중국 A사 제품이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실정이다.

뛰어난 성능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A사 드론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는 공식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복수의 사업자들이 수입해 판매 중이며, 판매 가격은 이들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산업용을 제외한 농업용 드론은 '농기계'로 분류돼 수입업자가 국내에 들여 올 때는 부가세와 관세를 100% 면제받고 있다.

문제는 같은 제조사 모델인데도 국내 B사는 특정 모델을 1500만원대에 판매하고 있는 반면, C사는 1800만원 대에 공급하고 있다. 두 사업자 모두 수입원가 대비 가격은 300~400% 높은 수준이다.

폭리 수준으로 판매 가격이 책정된 농업용 드론은 이들 수입업자 외에도 국내 유수의 농기계 제작사들까지 가세해 농가에 판매하고 있어 기업윤리 적인 측면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더라도 정부는 드론 수입·판매시장을 공급자 중심의 시장 자율에만 맡긴 채 뒷집만 쥐고 있어 전반적인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손이 부족한 농작업 현장에서 농약과 비료 살포용 수단으로 농업용 드론의 효율성이 입증되면서 농도인 전남 지역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농가에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 판매 시장 실태점검·제도개선 시급 지자체 수의계약 '보조금 지원' 남발

드론을 공급하고 있다.

보조금은 각 지자체가 드론 기계 구입 비용의 50%를 보조한다. 나머지 50%는 농가에서 자기부담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전남지역 지자체가 구매하고 있는 농업용 드론의 경우 중국 A사 제품이 90%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대당 1800여만원 수준으로 판매 가격이 책정된 드론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 십대씩 일괄 구매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확인됐다. 지자체들의 경우 '지방계약법' 규정에 근거해 2000만원 미만의 경우 지역에 사업자를 둔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수의계약 체결 대상 사업자 대부분은 해당 지역에서 농기계를 판매 중인 업체로, '수의계약'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일선 지자체에서 농기계 보조금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판매업자가 제시하는 가격에 대해 '불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각 지자체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발간해 공급하는 농기계별 판매가격이 표시된 안내 책자가 배포돼 있다.

이 책자를 보면 중국 A사 드론의 경우 같은 모델이지만 판매업자에 따라 가격 차이가 대당 400만원 가까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전남 서남권 한 지자체의 경우 농업용 드론을 구입하면서 높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무명하지 못한 계약 체결로 농가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이 헬게 낭비를 막고 농가 부담을 덜어 줄 방법이 있는데도 판매 가격만 수입원가 대비 400% 폭리 수준에 이르는 드론을 보조금 지원사업 농기계로 선정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업체와 담합 의혹까지 일고 있다.

농업용 드론 기계 등은 가격이 고가로 형성된 것이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불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완도해상서 1t 밍크고래 1마리 혼획

완도해상에서 무게 1t, 4.5m 크기의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린 채 발견됐다.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2시30분께 완도군 보길면 보육항 인근 해상에서 4.5m 크기의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것을 A호(7.31t급) 선장 박모(58)씨가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박씨는 바다에 설치된 그물을 철거하던 중 밍크고래를 발견했다. 밍크고래는 머리 부분에 그물에 의해 끊힌 흔적이 있었지만 작살 등의 포획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패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여서 해경은 위판절차를 걸쳐 고래를 선장에 인계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동해에 서식하는 고래가 번식을 위해 봄철 서해 근해로 이동하면서 설치된 그물에 걸린 것 같다"고 밝혔다.

완도=김광수 기자

## 10년지기 살해·암매장 40대 검찰 송치

동업을 약속한 10년지기의 투자자금 2000만원을 빼앗고 살해해 야산에 유기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앙경찰서는 투자금을 빼앗을 목적으로 지인을 살해한 조모(44)씨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오는 17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같은 동네 지인인 유모(37)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빼앗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회사원인 유씨와 헬스장을 운영하는 조씨는 동네 지인사이로 헬스장 사업을 함께 하려고 계획했다.

조씨는 유씨에게 동업자금으로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며, 유씨는 사건 전날 현금 2000만원을 출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씨는 사건당일 오전 4~5시에 현금 2000만원을 가져온 유씨를 만나 자신이 전날 빌린 렌트 차량을 이용해 함께 포천시로 이동했다. 이후 조씨는 유씨의 머리 뒷쪽을 둔기로 가격해 살해한 뒤 자신의 모친 묘소가 있는 포천 소재 인근 야산에 사체를 유기했다.

뉴시스

## '제주 보육교사 살인 사건' 유력 용의자 검거

장기 미제로 남아있던 9년전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8시20분께 경북 영주시에서 거주하던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세·여)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박모(49)씨 붙잡았다.

박씨는 사건 당시 경찰에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던 택시기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 미제사건 TF팀은 9년전 수집한 용의자군의 기존 진술기록과 녹취록의 음성을 재분석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증거물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월29일부터 3월2일까지 동물사체 실험을 통해 당시 피해자 사망시점을 새롭게 특정해 용의자군을 압축, 뒤를 쫓아 왔다.

## 고교생 수학여행 중 버스사고...15명 경상

수학여행을 떠난 경기 고양지역의 한 고등학교 1학년생들이 버스로 이동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학생들이 크게 다치지 않아 학교 측의 통보를 받고 놀란 학부모들이 가슴을 쓸어 내렸다.

16일 A고등학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5분께 하남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광안터널 안에서 버스 3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사고 버스에 A고등학교 1학년생 307명이 8대에 나눠 타고 천안국립청소년 수련원으로 이동 중이었다.

사고는 6~8호 차가 정체를 서행하는 과정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추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7호차 버스에 타고 있던 15명의 학생이 타박상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안전조치를 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초등학교 지진대피 훈련 16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성지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 200여 명이 지진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 전남선관위, '목욕 쿠폰' 돌린 예비후보·배우자 고발

전남도선관위위원회는 6월 당양근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총 81만원 상당의 목욕 쿠폰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배우자 B씨를 16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께 선거구민에게

지지부탁과 함께 B씨로부터 받은 목욕 쿠폰 5매(3만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지난 2월께 선거구민에게 실 명질 선물 명목으로 직접 구입한 목욕 쿠폰 130매(78만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목욕 쿠폰을 제공받은 선거구민에 대해서는 선거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정환 기자



장성에서 쉬하세요.  
숲과 호수의 경치를 느끼며 즐길 수 있는 장성호 수변길

멜로루  
신티  
장성군